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부산총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 성 훈 KOFID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장

목 차

I. 들어가면서

1. 부산총회 관련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2. 부산총회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3.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4. 시민사회의 향후 과제

II. 결론

I. 들어가면서

‘개발원조의 올림픽’이라 불리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과 정치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되었다. 국제회의로서의 행사 조직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현재 부산파트너십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로마에서 처음 시작한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이번 부산총회에 업저버가 아닌 대등한 공식 참가자로 처음 참여한 시민사회는 부산 총회의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활발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과 부산총회 기간과 직후 이루어진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총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시민사회는 내년 2월 공식 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론에서 평가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평가의 방법론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부산 총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개발 행위자가 참여한 만큼 행위자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¹⁾

그리고 평가의 대상을 가시적인 최종결과문서에 국한할지 아니면 준비 과정과 부산 총회에서 이룬 합의의 정치적 영향 등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먼저 역사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회의인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에 비추어 이번 부산파트너십을 평가할 수 있다. 부산총회가 2003년 로마회의에서 시작한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4차이자 마무리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전 회의와의 비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조효과성 논의 이전에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결과문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개발재원에 관한 몬트레이합의 등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IADGs)의 관점에서 부산파트너십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올해 7월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 이후 작성된 부산결과문서(BOD) 1차 초안과 이후 6번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비교해보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추가되었고 누락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의 가치와 이해관계 및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평가기준은 공적인 문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형식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평가기준과 함께 시민사회는 맥락적이면서 전략적인 평가 기준을 중요시하고 있다. 맥락적 평가란 개발원조의 현장에서 부산 총회의 결과를 보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미 악화되고 있는 개도국의 에너지와 식량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채무위기가 국제개발협력에 끼친 부정적 영향, 2010년 말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분출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화의 열기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 환경의 관점에서 과연 부산총회가 이러한 도전의 해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략적 평가란 국제시민사회 특히 BetterAid가 부산총회를 준비하면서 채택한 입장과 정책옹호 목표와 실행전략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9월 발표한 입장문서와 한국정부에 대한 10개항 정책요구는 이번 부산총회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되, 부산총회 결과를 평가하는데 공식적으로는 BetterAid와 KoFID의 정책입장 문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1) 부산 결과문서 1항에서는 참가자를 참가국 정부대표,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원조 관련 기관 대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의회,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의 정부간 기구(regional organizations)로 명시하고 있다.

1. 부산총회 관련 국제시민사회의 활동

국제 시민사회는 BetterAid와 Open Forum이란 두 개의 국제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부산총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였다.²⁾ 둘다 2008년 아크라 회의를 계기로 출범하였는데 Open Forum은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과 이를 가능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온 반면, BetterAid는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전반을 다루어왔다.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네트워크이지만 OECD와의 관계 등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에서는 BetterAid 플랫폼 이름으로 이루어져왔다.

약 2,500명에 달하는 부산총회 참가자 중 시민사회의 공식 참가자는 300명이었다. 2005년 파리 회의에서 약 20여개 단체,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 50여 단체에 비해 부산 총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양적으로 크게 증대되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괄목상대한 진전이 있었다. OECD 원조효과성 실무작업반(WP-EFF)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발언권 측면에서 정부와 동등하게 참여하였고 10월 이후 최종문안 협상과정에서는 자체의 협상대표(Sherpa)를 통해 협상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부산총회의 사전 준비 성격인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이하 부산포럼)은 KoFID, BetterAid 및 Open Forum 세 단체 공동주최로 2011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부산포럼에는 해외에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 330여명과 국내에서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을 포함 약 600명이 참여하여 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고 부산총회 기간 중의 발언 및 로비 전략을 수립하였다.

부산 총회 기간동안 국제 시민사회 대표자는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고, 주제별 전체회의 및 빌딩블록과 주제별 세션 등 거의 모든 행사에서 발표 기회를 가졌다.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UN회의와 달리 시민사회는 정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거의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소 ‘파격적’이기도 한 시민사회의 참여기회 제공은 주최기관인 OECD와 한국정부의 전략적 배려도 있지만, 개발원조에서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부산 총회 기간 중 국제시민사회 대표는 매일 오전과 저녁 두 번에 걸쳐 최종 결과문서 협상 및 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공통의 입장 및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국제시민사회는 BetterAid의 단일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입장으로 협상과정에 참여하였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2) 두 조직의 구성 및 성격 그리고 부산총회의 준비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손혁상 글 참조.

2. 부산총회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비록 부산총회에 BetterAid를 통해 전세계의 수많은 개발원조 단체가 참여하였지만 모든 단체가 BetterAid의 입장과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원조효과성 논의가 OECD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BetterAid의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거나 외부에서 비판하는 역할을 하였다. Social Watch와 LDC Watch 등 원조효과성 자체보다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 패러다임과 개도국 빈곤의 구조적 요인 특히 국제정치경제 체제를 문제시하는 단체는 유엔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발효과성 논의는 2002년 몬트레이 컨센서스로의 복귀를 의미하므로 부산총회까지의 과정은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유엔이 2002년 MDGs 정식화와 2003년 몬트레이 합의 이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마련에서 주도권을 OECD에서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원조효과성 프레임 자체가 서방선진국의 원조금액 동결과 축소 및 원조사업의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에서 면죄부 성격을 지니고 있고, 책임을 개도국과 ‘신흥 공여국’에 전가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BetterAid내에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단체가 적지 않지만 BetterAid는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 참여해서 개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번 부산총회에 임하였다.

2.1. BetterAid의 평가

가) 일반적 평가

Betteraid와 Open Forum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단체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이스탄불원칙과 Decent Work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진전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발협력주체의 다각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역할 분담과 책무성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에 대한 결정이 부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 후로 연기된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단체는 부산총회의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는 6개월 후 부산파트너십의 구성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에 대한 지표(indicators)와 channels에 내용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최종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총회 준비와 본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시민사회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시민사회 대표가 협상대표(Sherpa)로 최종문서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점, 총회 개막식과 폐회식에서의 시민사회대표의 연설, 그리고 거의 모든 세션에서 시민사회 대표가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비해 부산총회의 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이 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과문서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는 역설적으로 시민사회가 협상의 주체로 참여했기에 최종 결과문서에 대해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시민사회가 이번 부산회의에 정부대표와 동등하게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자간 협상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협상대표의 역할로 인해 오히려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 주제별 평가

부산총회의 의제는 크게 ‘원조효과성’ 주제하에 파리선언 이행 심화와 ‘개발효과성’ 주제하의 새로운 이슈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원조체제 구축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협상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고 본 회의 기간 중에도 수원국 시스템 활용과 중국과 인도의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시민사회의 우선 관심사였던 노동, 여성 및 인권은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관련 주제 가운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관련하여 BetterAid는 중국과 인도가 마지막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파리원칙 등 기존의 원칙과 부산총회 결과에 대해 자발적 준수라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수원국에 비해 공여국이 파리선언 특히 상호책임성 원칙 분야에서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용은 부산결과문서의 정치적 법적 구속력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는 BetterAid 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미약하지만 국제적 규범의 틀 내에서 중국과 인도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남남협력이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핵심적인 주제였다면 개발효과성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민간기업의 개발에의 참여였다. BetterAid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인정하지만 다차원적 책무성(multiple accountability) 원칙에 따라 민간기업 또한 ILO, OECD 및 UN이 제정한 민간기업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원조의 민영화

(privatization)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회적책임(Social Accountabilit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고 민간기업의 책임 이행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etterAid는 개발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개발과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수출주도 성장 이데올로기의 강조하고 있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32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³⁾

원조효과성 의제 관련하여 BetterAid는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이행 평가에서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은 미해결과제 (unfinished business)에 대해 효과성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부산결과문서 초안에 담겼던 2015년까지의 모든 무상원조의 비구속화, 의무적인 수원국 시스템 이용, 원조 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 등 몇몇 전향적 조치들이 일부 공여국의 반대로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BetterAid는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 취약국가 그룹(g7+)이 발전시킨 취약국가 지원을 위한 뉴딜을 환영하고 평화구축과 국가건설의 목적(PSGs) 설정과 이행 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BetterAid가 2011년 3월 채택한 “HLF-4 관련 대응전략과 정책제안” (CSOs on the Road to Busan: Key Messages and Proposal)는 네 개의 영역 - 민주적 주인의식에 기초한 개혁을 통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전적인 이행 평가 및 심화, 빈곤의 원인과 불평등 퇴치 및 인권 기준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실천을 통하여 개발효과성 강화, 고유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발주체로서의 다양한 CSO의 전적인 참여 보장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개발협력 구조 촉진 - 하에 10가지 정책 에드 보커시 과제를 설정하였다.⁴⁾ 이에 따른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래 표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3) 민간부문과 개발

32. 우리는 혁신, 부, 소득, 일자리 창출, 국내 자원의 활용에 있어 민간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 a) 재계의 대표적인 조직들, 노조 및 여타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민간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직접투자 및 민관 파트너십의 증대, 평등한 방식, 특히, 국가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가치 사슬 (value chain) 강화, 개발 목표 지원 노력의 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과 규제 환경을 구축한다.
- b)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정책 및 전략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 c) 공동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민간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 d) 성과와 영향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력으로써 “무역을 위한 원조”를 증진하여,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민간부문 주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접근법을 증진한다.
- e) 민간부문 및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개발과 사업의 결과를 서로 보강하고 동시에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유한다.

4) BetterAid는 이 문서 이전에 “개발협력에 관한 일반적 입장”(Development Cooperation: Not Just Aid, 2010년 1월), “개발효과성에 관한 입장”(Development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Rights-based perspective, 2010년 10월), “개발협력 국제체계에 관한 입장”(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architecture just: governance

〈HLF4관련 대응전략과 정책제안〉에 따른 부산총회 결과 평가

주요 내용	평가
A. 민주적 주인의식에 기초한 개혁을 통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전적인 이행 평가 및 심화	미흡
a.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진척 실패 문제 제기	부분적 반영
b. 개발협력의 민주적 주인의식 실현을 통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강화 및 이행	부분적 반영
c. 책무성 및 좋은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기반으로서의 투명성 이행	제한적 반영
B. 빈곤의 원인과 불평등 퇴치 및 인권 기준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실천을 통하여 개발 효과성 강화	미흡
a.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실천을 위한 서약 및 이행	제한적 반영
b.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촉진 및 이행	부분적 반영
c. 사회적 포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주춧돌로서 적합한 일자리 제공, 아젠다를 이행	부분적 반영
C. 고유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발주체로서의 다양한 CSO의 전적인 참여 보장	부분적 반영
a.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의 승인 및 채택	적극적 반영
b. CSO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및 공여기관의 정책, 법률, 규제 및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동의	부분적 반영
D. 공평하고 정의로운 개발협력 구조 촉진	미흡
a.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포용적 부산협약(Busan Compact)을 착수-서약 준수 시한을 규정하고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미흡
b. 정책 대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다자간 포럼 구성	미흡

2.2. Open Forum의 평가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 증진을 주된 목표로 일해온 Open Forum은 부산결과문서 22항에서 이스탄불원칙과 이의 시행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하였다.⁵⁾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개발 정책과 이행을 감시하는 에드보커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의 인권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인

principles and pillars, 2011년 3월) 세 개의 정책문서를 발간하였다.

- 5) 부산결과문서 22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중심의 접근을 활성화하며, 개발 정책 및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이행과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완되는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 a) 우리들 기존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특히 우리의 합의된 국제 권리에 부합하는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 b)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탄불 원칙과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바탕으로, 개발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책무성을 강화하는 관행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

권에 기반한 접근(RBA)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국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가 개발효과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이 정부나 민간기업 등 다른 개발 행위자와의 관련 항목에는 없고 시민사회단체에 국한해서 언급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대한 표현은 아크라에서 이미 언급했던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계로 지적되고 있다.

2.3. 노동조합의 평가

부산최종 문서는 22항의 시민사회단체 처럼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제3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개도국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함께 개발협력의 목표로 명시되었고 제11항에서 인권,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장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공통의 원칙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민간기업(private sector)를 다룬 제32항에서 노동조합을 기업과 함께 개발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였다. 이렇듯 양질의 일자리는 부산총회에서 처음으로 OECD의 개발효과성 담론에 공식 의제로 포함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노동조합연합(ITUC)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번 부산포럼에 약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국제 노동조합의 적극적 노력과 개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BetterAid 초기부터 노동조합은 여성운동 단체와 함께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해왔고 양질의 일자리 등 노동 이슈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조합연합은 이번 부산총회에서 민간기업이 개발에서 국가와 동등한 행위자로 강조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번 부산결과 문서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과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2.4. 여성단체의 평가

젠더는 2005년 파리선언 42항에서 환경과 함께 cross-cutting 이슈로서 한번 언급되었고⁶⁾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에서는 3항, 13항 c), 21항 b) 그리고 23항 a) 에서 모두 네번 언급되었다.⁷⁾ 여성

6) 파리선언 42항. 환경 분야 이외에도 양성평등과 같은 기타 크로스 커팅 이슈에서도 원조 수원국과 공여국 간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

단체는 파리에 비해 아크라에서 비록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성평등 증진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젠더가 주인의식의 이행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부산결과문서에서는 인권,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장애와 함께 성평등이 중요한 공통의 원칙으로 강조되었고 제20항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Women's Empowerment)가 동시에 개발협력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강조하였다

여성단체는 젠더가 아크라에 비해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지만 성평등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필수요건으로 간주하고 성별분리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지표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부산총회 기간 중 8개의 빌딩블록에 젠더가 포함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비판하였다. 특히 여성인권적 관점을 반영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2.5. 인권단체의 평가

인권의 경우 2005년 파리 선언에는 언급조차 없었으나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에서는 전문에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일반 원칙으로 한번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부산총회 결과문서에는 전문에서 밀레니엄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3항에서 민주주의와 모범적 가버너스나 함께 언급되었고 11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애와 함께 개발협력의 주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CSOs)의 역할을 강조한 22항과 개발효과성(효과적 개발)을 정의한 28항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은 22항의 시민사회의 역할 부분에 포함되었다. 즉 이전에 비해 인권은 양과 질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발전권 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선택의정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⁸⁾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도 모든 개발행위자에 해당되는 원칙

7) 아크라행동강령 3항. 장기적 관점에서의 빈곤층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양성평등, 인권, 환경 정책의 중요성 강조
13항.c) 양성평등, 인권, 환경 지속성을 위한 국제 조약에 일관된 방식으로 원조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도입될 필요성 시사

21항.b) 국가 차원에서 여성보호와 참여가 보장되는 원조 수원국과 공여국 공동의 평화유지 및 재건 목표 합의 및 도입의 필요성 강조

23항.a) 성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분리자료 포함을 통한 정보체계 개선으로 수원국 정책기획, 도입, 평가의 질적 향상 기대

8) 부산결과문서 20항. 우리는 개발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하

과 전략이 아니라 22항의 시민사회단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시민사회는 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를 다룬 20항에서도 여성권리적 접근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3.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3.1. 한국시민사회의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평가

부산총회의 결과에 대해 국내의 보수언론은 ‘새로운 원조의 방향 제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한국은 국제원조의 모델’ 등 긍정적이고 자기만족적 평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언론은 부산총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부산총회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KoFID와 ODA Watch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단 부산 총회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체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산 파트너십에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뒷받침되고 각 나라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oFID는 민주적 주인의식 (democratic ownership) 강화, 개발원조에서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여 인정,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의 언급 (22항)을 진전으로 평가하였고, ODA Watch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원조주체들의 참여 확대,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 기반 마련,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책임과 참여 촉진 그리고 불평등 해소와 인권 존중, 성평등 등 개발의 공동 원칙 강조를 성과로 평가하였다.

한편 부산총회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 KoFID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고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고, 국별 우선과제에 따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양성 불평등의 감소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 a) 성별 데이터의 수집, 배포, 조화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심화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투자의 방향을 이끌며, 이를 통해 공공지출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 b)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목표를 국제적 및 지역적 공약을 바탕으로 한 책무성 체계에 통합시킨다.
- c) 평화구축 및 국가 재건 등을 포함한 개발 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문제를 다룬다.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언급된 점,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개발원조 금액의 축소 및 동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원조 증액에 대한 약속이 없었음, 원조효과성과 효과적 개발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을 위한 지표를 제정하지 못하고 미래의 과제로 연장한 점,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젠더 관련해서는 성 평등이 부산결과문서에 포함되었으나 여성을 인권의 관점이 아닌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한편 ODA Watch는 중국 등 BRICS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미완성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지표, 공동의 행동계획 마련에 실패, 공여국의 약속 미이행 및 원조예산을 삭감하면서 민간재원으로 대체한 점, 그리고 개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 것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3.2.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는 부산 총회의 주최국가로 OECD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하였다. 한국은 단순한 장소 제공자가 아니라 의제를 주도하고 협상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정부는 7월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 때 부산총회 결과문서(BOD)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입장문서는 부산총회의 논의 초점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부산총회 이후 OECD와 유엔 그리고 G20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개발효과성의 주요한 요소로 젠더를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젠더에 관한 독자적인 항목이 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정부는 10월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 기간 중 가장 먼저 이스탄불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이후 이스탄불 선언이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를 포함하는 지구적 원조논의 체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서방국가와 달리 반세기 전 가난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BRICS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G2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한국의 모든 외교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산총회의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진영논리로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남남협력 파트너에게 자발적 준수(On a voluntary basis)라는 조건을 예외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

았지만 형식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데는 주최 국가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총회 개막식 환영 연설에서 국제 개발협력에서의 공생발전을 강조하면서 2015년까지의 ODA 증액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한국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공과 함께 실패도 있었기에 경제성장 못지 않게 민주화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원조효과성 논의를 원조동결 또는 축소의 알리바이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개도국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부산총회 논의 방향과 분위기 조성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KoFID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1일 부산총회에 대한 논평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의 민주화는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국내외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증액 약속 못지 않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개발 정책의 질적 개선”이며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분절화, 과다한 비구속성 원조의 문제점 등 개발의 국제적 규범에 뒤쳐진 국내의 개발원조 정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총회 결과문서 내용 관련 한국정부는 G20의 경제성장 중시 개발 모델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2015년까지의 모든 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소극적 입장, 그리고 여성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젠더 의제 추진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한국정부는 부산총회 준비 초기부터 KoFID를 통하여 국내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부산총회 의제와 전략을 준비 및 실행해왔다. 특히 시민사회 대표자 300명 참석, 시민사회 대표자의 개막식과 폐막식 연설 기회 제공 등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부산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최국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였다.

KoFID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부산총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산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가 “부산 파트너십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KoFID는 2011년 8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입장과 정책 제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부산총회 준비와 이행원칙, 파리선언 평가와 원조개혁, 부산총회의 의제와 정책방향, 원조와 개발효과성,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상호책임성과 개발영향평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체계, 부산 글로벌개발컴팩, 포스

트 부산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는데 한국정부에 대한 10개 요구사항은 이번 부산총회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10개 요구사항에 담긴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이번 부산총회 결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주요 결정이 6개월 후로 미루어져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목표 설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는 10개 개별 요구사항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10개 요구사항

주요 내용	평가
A. 민주적 주인의식에 기초한 개혁을 통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전적인 이행 평가 및 심화	미흡
a.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진척 실패 문제 제기	부분적 반영
b. 개발협력의 민주적 주인의식 실현을 통하여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강화 및 이행	부분적 반영
c. 책무성 및 좋은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기반으로서의 투명성 이행	제한적 반영
B. 빈곤의 원인과 불평등 퇴치 및 인권 기준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실천을 통하여 개발 효과성 강화	미흡
a.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실천을 위한 서약 및 이행	제한적 반영
b.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촉진 및 이행	부분적 반영
c. 사회적 포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주춧돌로서 적합한 일자리 제공, 아젠다를 이행	부분적 반영
C. 고유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발주체로서의 다양한 CSO의 전적인 참여 보장	부분적 반영
a. CSO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의 승인 및 채택	적극적 반영
b. CSO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및 공여기관의 정책, 법률, 규제 및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동의	부분적 반영
D. 공평하고 정의로운 개발협력 구조 촉진	미흡
a.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포용적 부산협약(Busan Compact)을 착수-서약 준수 시한을 규정하고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미흡
b. 정책 대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공평하고 포용적인 다자간 포럼 구성	미흡

4. 시민사회의 향후 과제

4.1. 국제 시민사회의 과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시민사회는 BetterAid와 Open Forum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국제 플랫폼을 통해 부산총회의 의제에 대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 및 수렴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었다. 부산총회 결과 모니터를 위한 지표와 목표 및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결정이 6개월 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두 플랫폼은 부산총회를 계기로 등장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12년 2월 중순 열리는 BetterAid와 Open Forum의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공동 평가회의에서 두 플랫폼의 통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총회 이후의 과제는 크게 시민사회 내부와 각국의 정부와 OECD 대상 에드보커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국제 시민사회는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 시민사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실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22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이스탄불 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프레임워크를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을 통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mnesty International 과 같은 전통적인 인권단체가 개발협력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 인권의 통합적 접근은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두 프레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맥락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단일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BetterAid 내부의 민주적 대표성과 주인의식을 높여 시민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부산총회 준비와 본회의 과정에서 효율성을 명분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내부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협상대표(Sherpa)를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고 반영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개별 국가 정부 대상 로비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본질적 가치와 원칙까지도 타협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혼란 또는 부정이라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협상대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산총회를 계기로 기존의 원조효과성 담론이 효과적인 개발협력 또는 개발효과성으로 발전되면서 UN DCF, G20 개발실무분과 등 개발협력을 다루는 다자간기구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중요한 과

제로 등장하였다. 대다수의 BetterAid 소속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성과 정당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업저버 지위에 비해 동등한 참가자로 참여하는 OECD의 제도와 절차가 시민사회에게는 전략적으로 더욱 유리해 보인다. 따라서 형식적 당위와 명분보다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 내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고려할 때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민사회 내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의 수립이 매우 중요해 진다.

의제의 측면에서 부산총회를 계기로 등장한 개발효과성 논의는 내년 6월 브라질의 Rio+20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개발협력포럼(DCF) 그리고 2015년 이후 MDGs 대안을 모색하는 2013년 유엔 총회로 이어지면서 그 외연이 확장되고 내용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총회 준비과정에서 BetterAid와 한국정부 및 일부 서방국은 기존의 원조효과성 담론에서 개발효과성 담론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발효과성의 비전과 내용은 상반된다는 것이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분명히 드러났다. 잘 알려졌듯이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포함된 개발효과성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etterAid는 이러한 개발효과성 의제를 계속 주장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에 주창해야 할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4.2.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한국시민사회는 부산총회를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공동 주최단체이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신생 공여국의 시민사회로 참여하였다. 개발원조 사업단체와 정책 애드보커시 단체의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통한 부산총회 준비와 참여는 국내 개발협력 단체의 국제적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국제담론의 환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경험을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 및 설명하는 경험을 쌓았다. 1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직접 참여하고 50여명의 대표자가 부산총회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향후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리더십 형성과 국제사회의 역할 모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향후 부산총회를 주최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영향력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와 책무성 요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총회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총회에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롭고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산총회 주최국으로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존의 OECD 중심이 아니라 UNDP와 유엔 개발협력포럼(DCF) 등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BRICS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와의 연관성 또한 높다. 따라서 OECD와 G20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정부의 중재 또는 조정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 6월까지 개발 예정인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지표와 목표 설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정부는 부산총회 결과를 국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올해 8월 KoFID의 입장문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국제수준에 매우 뒤떨어져 있고 개선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2012년 예정된 OECD DAC의 동료심사(peer review)는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 전반을 OECD 기준과 부산총회 결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할 기회이다. 특히 분절화 극복,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ODA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개발효과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⁹⁾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외교 및 에드보커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OECD DAC 회원국가에 비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경험은 매우 일천하고 전문 인력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부산 이후 Rio+20과 포스트 MDGs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부산총회를 계기로 축적한 국제연대 역량을 체계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국제연대의 특성상 한국정부의 협력과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의 정부와 한국의 개발원조 단체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ODA를 국제 및 개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확대하여, 한국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자세한 내용은 이태주 “부산 HLF-4 이후 한국의 과제: 시민사회의 관점” 참조.

II. 결론

부산총회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도전이자 기회였다. 부산총회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후 Rio+20과 포스트 MDGs 논의 등 국제개발 담론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다수 국가가 원조를 외교의 수단이자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구촌의 기아와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민주적 가버넌스,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제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정부가 주장해온 ‘개발효과성’이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난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산총회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의제설정에는 성공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데 까지 이르지 못했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공통원칙인 개발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주인 의식, 성과중심,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 그리고 시민들과 서로에 대한 책무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부산결과를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몇 년 후 부산총회의 이행에 대한 평가회의시 주최국의 프리미엄 없이도 이번 부산총회처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산총회 개최국 정부이자 시민사회로서 공통의 책무성이자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이성훈,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와 한국의 역할” 국제개발협력 (2011, No 1), 한국국제협력단.

이성훈, “민주주의와 국제개발협력 -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ODA”, 국제개발협력 (2011, No 3),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입장과 정책제언 (포지션 페이퍼)”, 2011년 8월.

이태주, “부산 HLF-4 이후 한국의 과제: 시민사회의 관점”, 부산. HLF-4이후의 세계원조 체계와 한국의 과제, 2011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학술회의.

손혁상, “부산개발원조총회(HLF-4)와 세계시민사회의 대응전략: BetterAid와 Open Forum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1, No 3), 한국국제협력단.

박은하, “HLF-4에 젠더의제 통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결과”,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젠더 의제 통합> 제73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김은경, “HLF-4에 젠더의제 통합 의미와 Post-Busan”,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젠더 의제 통합>, 제73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